

##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전 국민의 기본 역량 강화

장원섭(연세대 교육학과)

2001년 12월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사람, 지식, 그리고 도약』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을 통하여 정부는 “경쟁력 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분야 국가 경쟁력 10위권 진입”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인적자원의 양성과 공급, 배분과 활용,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의 구축에 있어 2005년까지 추진할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정책들은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성장을 위한 지식과 인력개발,’ ‘국가인적자원 활용 및 관리 선진화,’ ‘국가 인적자원 인프라 구축’ 등 4대 정책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 안에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네 가지 정책영역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것이 바로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들이다.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 사회적 신뢰의 구축과 결속의 강화, 인적자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이 필요한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정책영역으로서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정책은 크게 다섯 가지 과제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안에 많은 정책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국민의 기초교육을 보장하고 초·중등교육체제를 자율화하고자 한다. 기본교육의 기회가 충실하지 못할 경우 누적적인 학습지체를 겪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기본교육(initial education)으로서 초·중등 교육이 국민 개개인에게 지속적인 자기개발 또는 평생학습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식기반사회가 필요로 하는 핵심 능력(core competence)이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그러한 교육은 반복작업하의 굴뚝경제 체제에 기초한 형태가 아니라 교육방식, 교육내용에서 다양성을 증가시켜 주는 21세기식의 새로운 교육체제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사회생활

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학교교육을 통하여 배울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의 자율 운영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초·중등교육체제를 확립하여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초·중등학교교육을 통해 국민 기초교육을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 기초교육 보장을 학교의 기본 사명으로 정립하고, 그 최소 성취기준을 설정하며, 이를 위한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모든 학생이 외국어, 정보화 능력에 있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에 대한 진로교육과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국가의 지원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초·중등교육체제를 자율화하기 위해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육행정체제를 개편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초·중등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하여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학교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어, 정보화 능력 등 기초능력 분야에서 학력 미달자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학교 중도탈락자를 위한 대안학교의 설립과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 혁신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단위학교 중심으로 교육시스템을 개편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 정책영역에 포함된 두 번째 과제는 진취적·창의적 청소년 문화 육성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일컬어진다. 이 시대에 문화예술 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의 상상력과 감수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국가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문화활동을 통하여 21세기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보다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문화활동을 통하여 미래 한국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 지원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

로, 청소년 수련과,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자연학습장, 야영장 등 여가 및 체험 활동을 위한 시설 공간을 확충하고 학교, 박물관 등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시설을 적극 활용하며, 주 5일제 수업 등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지원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5년까지 청소년지도사 15,000명을 양성할 것이며,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활동에 대한 누적관리, 이용료 감면 등의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정부는 학교,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이 참여한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협의체 구성을 비롯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청소년 문화활동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화된 ‘청소년 개발 지수(Community Youth Development Index)’를 개발하고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적용한 다음 평가·검증 후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셋째, 정부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의 구축을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국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이 요청된다. 특히,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지식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자기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평생학습을 위한 학교단계 직업교육을 혁신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단계부터 모든 학생을 위한 기초 직업능력 교육을 강화하고, 특성화 고교 확충 등 실업계 고교 체제의 다양화를 추진하며, 전문대학 및 대학의 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성인대상 직업교육과정’을 전문대학 및 대학에 확대·설치하고, 재직자 실직예방 및 실직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성인 직업교육기회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도 밝히고 있다.

기본계획은 다양한 학습경험을 공인해 주는 학점은행제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사이버 교육기관을 통한 평생직업교육도 확충하고자 하는 계획도 포함하

고 있다. 정부는 군복무기간 중에도 다양한 형태의 위탁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성인의 학습조직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정보를 원 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정부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이들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고자 한다. 예나하면, 최근 소득계층별, 성별, 연령별, 지역별, 학력별, 신체 조건별 불평등과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취약 계층의 능력개발 지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 복지차원의 적극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정책방안으로는 우선 저소득층 자활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고 한다. 정부는 노동과 복지 정책간의 연계,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전문요원, 직업상담원 등 관계 전문가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단위 교육훈련서비스 강화 등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고용·복지서비스 제공기관간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 실업자 및 보호대상 여성, 저소득·비진학 청소년의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

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연령별·장애유형별 요구를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적합한 교육기회와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즉, 원격교육, 사이버학습, 재택학습 등 신체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양한 학습방법 개발·적용하고 관련 부처간 정책조정·협력체제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직업훈련-취업을 연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노인의 고용 및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고령자·노인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한 각종 자원봉사 지원체제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노인 전문인력뱅크’를 설치하는 등 고

령자 및 노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도 밝혔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 보급 및 정보통신기술을 개발하는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노인, 농어민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2002년까지 '1,000만 정보화교육 계획'에 따른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효과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고자 한다.

전 국민의 기본 역량 강화를 위한 마지막 과제는 사회적 신뢰구축과 민주시민의식 정립이다. 인적자원의 개발은 개개인의 기능, 기술력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도덕적 성숙과 사회적 신뢰를 요구한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과 자율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성숙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합리적·개방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에서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확립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국민기초교육 단계부터 자율과 책임, 공정한 경쟁과 협력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을 배양하는 등 민주시민 기초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자발적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문제 및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활동의 확산을 유도할 계획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타인 및 타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국가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인권존중 의식을 함양하고 국제이해교육과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시민의식 형성을 위한 외국문화 이해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 합리적인 경제관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이론중심' 경제교육에서 '경제활동 기본원리 이해' 경제교육으로 전환하고 학교·가정·언론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해 생활현장과 관련한 교육·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경제단체, 직능단체 등이 중심이 된 고객중심 기업문화를 확산하고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윤리기준을 정립하며,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 고객 중심의 기업 문화 및 직업윤리를 정립하고자 한다. 기본계획에서는 향후 ‘주 5일 근무제’에 대비하여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재충전과 능력개발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사례를 보급함으로써 건전한 여가문화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고 합리적 소비 행태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소비자단체 공조로 직장·주부·아동 등 대상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보급하여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립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는 ‘사람과 지식’을 화두로 한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그것은 지식기반경제사회로의 이행에 대응한 창의적 인간 양성, 다양성 확대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교육복지 및 시민의식교육, 그리고 노동시장과 일의 세계 변화에 따른 평생학습체제의 구축 방안들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양적 팽창에 비해 질적 경쟁력이 여전히 미흡하고, 교육 및 인적자원 관련 기관과 단체의 유연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며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인적자원개발의 근간으로서 ‘전 국민의 기본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이 산·학·관·민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2005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 정책들이 우리 나라가 인적자원부문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